다산포럼

사라지는 한라산의 4·3 유적들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4월 어느 날 제주의 연구자 및 시민사회 선생님들 사이에 끼여서 제주 유적지 조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한라산 주변에는 제주 4·3 당시의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경찰의 수악주둔소 정도이다.

제주에서는 4·3 관련 유적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4·3 진상보고서 발간 즈음과 그 이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유적지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다. 무장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들은 곳곳에 남아 있지만, 아직은 문화재의 틀 안에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잃어버린 마을의 터들도 개발로 인해 흔적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제주의 난개발은 자연만을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4·3 역사도 지워 가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뜻있는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4·3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계셨다.

제주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으로 제주를 사랑해 즐겨 찾긴 하지만, 항상 마음 한 편에는 4·3의 역사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다.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이곳이 학살터라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라면, 결코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 편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장대와 토벌대의 격전지이자 제주 도민들의 피란 터였던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를 답사하면서, 4·3의 역사는 잔학한 학살과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전투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이 삶을 버텨 온 빛나는 승리의 역사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할 국가가,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외세와 결탁하여 민(民)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조차, 사람들은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종국에는 국가에서 정당한 사과를 받아 내기까지 했다.

최근 해외의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이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참상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이에 연루된 이들은 책임 있는 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이때 촉발된 수치심과 모멸감 등 도덕적 감정의 훼손이 다시 자살 및 살인 등 폭력적 행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민(民)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버리고 적으로 삼았을 때 엄청난 배신감·상실감·모멸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분노는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싶은 정도로 불타올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의 4·3 유적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흔적은 이들이 자연과 제주의 각종 구조물들을 지혜롭게 이용하며 삶을 이어 갔음을 말해 준다. 무덤 터 옆의 지형을 이용하여 무장대의 초소를 만들기도 했고, 4·3 이후 마땅한 생계가 없던 제주의 사람들은 한라산 중턱에서 산감의 눈을 피해 숯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숯을 한라산 700고지에서 동문시장까지 지고 가 억척스레 생활을 했다. 조선시대 이래 말 목장 관리를 위해 만들어 낸 산담(토성)을 이용해 무장대는 전투를 했고, 군 숙영지 역시 제주의 머들(돌무더기)을 가져다 조성하였다. 적이 되어 격렬하게 싸우거나 혹은 이 틈바구니에서 삶을 이어 가거나, 사람들은 모두 한라산의 지형·지세·인공구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기실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의 태반은 치열한 싸움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처절하지만 숭고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국가가 사람들을 버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살았겠지만, 삶을 이어 가기 위해 온갖 지혜를 발휘했다. 어쩌면 한라산이 이들을 품어 주었기에 엄청난 참상 이후에도 사람들의 회복력(resilience)이 가능했을 듯하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난개발로 인해 한라산의 귀한 역사는 사라져 가고 있다. 조선 시대 이래 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한 잣담(성벽처럼 쌓은 돌담)도, 4·3의 역사의 각종 유적지들도, 한라산 주변의 난개발과 더불어 흔적이 멸실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삶의 역사를 문화재로 혹은 '공공 역사'(public history)로 후대에 남기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라산과 한라산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 고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꾸어라."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역임한 엘리케 페날로사가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만이 시민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왜 도시공간을 공유해야 하는가, 왜 시민들이 공원과 아름다운 장소에 접근해야 하는가, 왜 시민들이 쉽게 이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공공 공간에는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평등하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면 먼저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취임 전 계획됐던 광활한 고가 고속도로망을 포기하고 300km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넓은 공원을 포함한 600개 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했다. 자동차의 운행 규제와 함께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혁신적 도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는 30달러짜리 자전거를 가진 시민이나 3만 달러짜리 외제차를 가진 시민이나 똑같이 소중함을 보여 주는 요소가 자전거도로라고 말했다.

근래 선진 외국 도시들 가운데는 자동차 지배 도시에서 사람 친화적 도시로 변모하며 다양한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도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사회적 신뢰가 충만한 평등 도시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유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결속이 도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도시다. 끼리끼리 모여 사는 계층문화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배려하면서 소외됨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하다.

'행복도시' 저자 몽고메리는 개인의 행복은 도시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웃을 더 신뢰하는 도시가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또 자신이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낀 사람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이처럼 도시를 바꾸려는 노력은 산업적·기능적 합리성을 최대 가치로 삼고 자동차를 앞세워 도시를 확장하던 근대 도시계획 사조가 여러 도시 문제를 만들어 왔음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했다. 또 소자녀·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나타난 혈연가족 붕괴, 빈곤 노인 증가, 절연 생활이 만든 고독 등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서도 기인한다. 아파트만 하더라도 산업적·기능적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양과 임대, 큰 평수와 작은 평수별로 구분해 배치하면서 계층 문화가 고착화 되고 거주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20세기 도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리와 개별성의 도시였다. 특히 현존주의에 매몰돼 토지의 공공 가치를 상실하고, 재산 증식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 도시였다. 퐁피두센터를 설계한 리차트 로저스는 도시에서 공공 공간이 무시되면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빈곤과 고립은 심화된다며 공공 공간의 소멸은 연쇄적 쇠퇴를 일으킬 심각한 사회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처럼 사람을 위한 공공 공간이 무시되면 사회적 관계성은 형성되지 않는다. 아파트에서 공공 공간이 무시되고 규격적이고 획일적인 배치를 하게 되면 도시 공간에 다양한 사회적 접촉 공간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 관계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건축에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해도 도시 공간이 자동차 친화적이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집 밖에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식사 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도시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자기 집에서도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도시의 경우 인간관계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가 절연 생활을 강요하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가 단순히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장만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 교환하는 장이 된 지가 오래됐다. 여전히 다양한 가치관과 삶, 문화 방식을 갖는 집단과 계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섞여서 소통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제 행복해지려면 물리적인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도시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행복한 도시를 기대한다.

청춘 톡톡

MBTI로 가족과 친구 이해하기

이지우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우리는 평소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가족조차 성격이 다른 것은 왜 일까? 우리 집 역시 '집안은 항상 시끌벅적해야 즐겁고 하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파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파로 나뉜다. 가끔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친구들의 경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 빈번하다.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잘 다가가며 분위기를 이끄는 활발한 성격인데, 다른 한 친구는 버스에서 벨을 누르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주목받거나 모르는 상대와의 대화 자체를 꺼려한다. 그런 서로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일 수 있지?' 혹은 '어떻게 그렇게 소심할 수 있지?'라고 묻는다. 그리고 보통 그 물음에는 '내가 더 옳아' 또는 '너의 방식은 이해하기 힘들어'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고민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족과 친한 친구와의 성격 차이로 인한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실마리를 최근 찾게 됐으니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성격 유형 검사'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이다. 현재 성격 검사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게는 잡지 등 흥미 위주의 성격 테스트로, 크게는 기업체 등 진로 선택을 위한 인성 검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MBTI에서는 두 개의 태도 지표인 외향(E)-내향(I)과 판단(J)-인식(P),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인 감각(S)-직관(N)과 사고(T)-감정(F)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밝혀서 4개의 선호 문자로 구성된 개인의 성격 유형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MBTI 검사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성격 유형은 모두 16가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에 적용해 보자. 친구가 '나 시험에서 떨어졌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떤 식의 답변을 할 것인가? 만약 '속상하겠다. 다음에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기능지표인 사고(T)-감정(F) 중에 공감과 위로를 중요시 하는 감정(F)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어떤 시험인데? 왜 떨어졌는데?'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무게를 두는 사고(T)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즉 T유형은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할 수 있는 반면, F유형은 일단 공감을 해 주고 나서 생각을 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유형이 만나면 유독 서로 서운한 면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MBTI 유형을 몰랐을 때에는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맞는 것 같고, 대답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MBTI 검사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의 성격을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MBTI 검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성격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용도쯤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MBTI의 각 요소들처럼 각자의 관점이 다른 것을 존중한다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社 說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 달라져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이차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이하 '시험평가센터') 공모 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됐다. 이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지만 정작 전남도는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시험평가센터는 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시험평가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국내 전지 3대 제조사 모두 '수요 기업'과 '결과 활용 동의 기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한 전남도를 제치고 기존 이차전지 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는 충북도가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충북도에 중요 연구개발 시설을 앗긴 셈이다. 어찌해서 번번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평가에 국가균형발전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집적도나 산업 인프라 등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부 공모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수요 기업과 기존에 구축된 설비·장비와의 연계 등에서도 이들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남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88.7%와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편중 지원은 지역 간 미래 성장동력 격차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시설 등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고 돌아 식탁에 오르는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병을 집어삼킨 아귀가 전남 지역에서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목포 시민 홍동우(35) 씨가 엊그제 광주일보에 제보한 영상을 보면 아귀 여러 마리를 손질하던 중 한 마리의 내장에서 500㎖ 플라스틱 병이 불거져 나온다. 아귀의 내장도 오염돼 괴사하는 등 식용으로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문제의 아귀는 목포 청호수산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아귀의 포획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전남에서는 전국 수산물의 57%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최근 5년 간 치운 해양 쓰레기 양도 13만 7818 t 이나 된다. 전남 16개 시군에서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는 1만 2514 t (2016년)→1만 9657 t (2017년)→3만 2618 t (2018년)→3만 1704 t (2019년)→4만 1325 t (2020년)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해양 쓰레기의 83%가 플라스틱류였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으로 141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7년 36억 6000만 원에 비해 3.85배 늘었지만 워낙 많이 유입되다 보니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해양 쓰레기가 어족 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어패류를 오염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해양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양 쓰레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과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해양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권 재창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또는 그런 국면을 '총체적 난국'(總體的 難局)이라고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경기 침체와 치안 불안 등 악재들이 겹치자 박희태 대변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의 여권 상황 역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역대 최대의 참패로 막을 내린 4·7 보궐선거는 여권에 대한 전국적인 민심 이반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대승에 취해 '20년 집권론'까지 거론했던 여권에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정권 재창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권을 둘러싼 상황은 실제로 녹록치 않다. 부동산 문제와 민생 경기 회복은 단기간에 풀 수 없는 난제다. 11월 집단 면역 등 백신 접종 문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내년 대선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투표를 하는 '마스크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여권의 필패는 자명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미·중, 북·미,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 구성되는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강력한 쇄신이 이슈가 되지 않고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골프는 힘을 빼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골프는 몸의 힘을 빼야 속도감 있는 스윙이 나오고 강한 임팩트가 이뤄져 원하는 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힘만 가지고는 절대 골프를 잘할 수 없다. 힘 빼는 데 몇 년씩 걸렸다는 골퍼들의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고개를 빳빳하게 든다면 결코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영욕을 거듭했던 정치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7 재보선 결과는 대선을 앞둔 여권에 정치적 보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소모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은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민심과 시대가 함께 열어 가는 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